

2017 年 9 月 30 日

[성명] 관동대지진 때 학살된 조선인 희생자 추도사 송부를 취소한 고이케 도지사에게 항의한다.

우리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국가 책임을 묻는 모임"은 조선인 학살 희생자의 추모와 학살의 해명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 모임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조선인 학살의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유족과 대면하며 진상 규명에 나서도록 요구해 왔다.

우리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 도지사가 2017 년 9 월 1 일 도쿄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관동대지진 94 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모식" (9.1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모 실행위원회 주최)에 추도사 송부를 취소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내년 이후에는 종래대로 추도사를 송부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까지 매년 도쿄 도지사의 추도사는 참석자 앞에서 낭독되어 왔다. 이번 고이케 지사의 판단은 단순히 기존의 관례를 무시한 것만이 아닌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고이케 지사의 이번 판단의 계기가 된 것은 2017 년 3 월 2 일 도쿄도 의회에서의 고가 도시아키(古賀俊昭) 의원의 질문이었다. 고가 의원은 조선인 희생자가 살해당한 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조선 독립운동가와 그들에 선동되고 추종한 사람들 때문"이라는 황당한 설을 도의회에서 주장하며 학살의 책임을 희생자에게 떠넘겼다. 그리고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 철거와 추모식의 추도사 송부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이케 지사는 추도사 송부에 대해 "제가 검토한 후 적절하게 판단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 결과가 추도사 송부 취소였다. 고이케 지사는 8 월 25 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추도사 송부 취소를 발표했다. 또한 9 월 1 일 기자 회견, 26 일 도의회 본 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도쿄도 위령당에서 열리는 법회에서 "모든 분들을 위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이케 지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기에 철회해야 한다.

첫째, 이 "판단"이 고가 의원의 요구를 계기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고가 의원은 마치 지진 당시의 뜬소문이 사실이었다는 듯 "지진 재해에 편승하여 흉악 범죄가 일어났다"고 말했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확실한 증거에 입각한 것이 아님은 이미 밝혀진 일이다. 이른바 "조선인 학살 정당화론"이라 할 수 있는 엉터리 언설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당당히 주장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로, 배외적인 언동에 시민권을 허락하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한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본래라면 고이케 지사는 "조선인 학살 정당화론"을 의연하게 비판하고 이를 토대로 한 요구를 거부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사는 고가 의원의 뜻에 부합한 결정을 내렸고 조선인 학살에 대한 자신의 생각 표명을 의식적으로 피했다. 8 월 25 일의 회견에서 민족 차별을 배경으로 한 학살에 대한 추도사를 하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민족 차별이라는 관점보다는 저는 그런 재해로 돌아가신 분들, 재해 피해, 다양한 피해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위령제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고가 의원의 요구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사실 "조선인 학살 정당화론"을 말하는 이들은 지사의 판단을 고가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인 "영단"으로 찬양하며 기세등등 하고 있다. 또 스미다 구청장은 고이케 지사를 추종하여 추도사를 보내지 않았다. 이런 사

태를 야기한 지사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둘째, 모든 피해자를 위령하고 있으니 개별 추도사는 내지 않는다고 하는 고이케 지사의 이론은 추도사 취소의 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1973년 추모비 건립은 민간 기부를 받아 도의회의 모든 정파가 동참했다. 그러한 경과가 있었기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쿄 도지사는 추도사를 보내고 참석자 앞에서 조선인 희생자 추모와 두 번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결의를 말해왔던 것이다.

고이케 지사의 결정은 이러한 역사적 경위와 참석자의 생각에 입각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고이케 도지사가 "이번에는 내가 판단했다"라고 한다면 판단에 이른 경위와 이유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 설명을 도외시한 지사의 판단은 추모비를 건립한 사람들과 추모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없다면 추도사 취소를 해서는 안된다.

셋째, 고이케 도지사의 결정은 역사적 사실로서의 조선인 학살을 은폐하고 있다.

전술했듯이 지사는 관동대지진 당시의 희생자를 일괄하였고, 또한 기자 질문에서 나온 "조선인" "학살"이라는 단어 사용을 계속해서 피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연재해로서의 지진 피해와 그 후의 관민에 의한 조선인 학살의 성질이 다른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천재지변으로서의 자연재해와 인재로서의 학살은 목숨을 빼앗긴 경위와 그 의미가 질적으로 다르다. 후자의 피해는 바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기인한 "인재"로서 지진 자체가 일으킨 일이 아니다. 지사는 8월 25일의 회견에서 조선인 희생자를 지진에 "부수된" 형태로, 연관된 형태로 돌아가신 분들"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조선인 희생자는 지진에 "연관"되어 숨진 것이 아니다. 관민의 일방적인 살육에 목숨을 빼앗긴 것이다. 당시는 지방 행정 관청도 유연비어 확대의 주체로서 학살에 관여했다. 도쿄 도지사의 추도사는 이러한 과거에 대한 자성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배외적인 언동으로부터 피해자를 지키고 다시는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결의를 확인하는 뜻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고이케 도지사는 기자 회견에서 천재지변과 인재의 성질 차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고, 도쿄도 위령당 법회 추도사에도 조선인 학살의 문구를 넣지 않았다. 조선인 학살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분명한 조선인 학살의 은폐가 아닌가. 8월 25일 기자 회견에서 기자의 "대지진 때 조선인이 살해된 사실이 부정된다"라는 우려에 대해 고이케 지사는 "다양한 역사 인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조선인 학살은 "역사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타민족에 대한 가해라는 "역사의 사실"이다. "인식" 등이라는 말로 학살의 유무를 애매하게 만들거나 정당화론을 시인할 여지는 없다.

우리가 이번 고이케 지사의 판단에 대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이다. 고이케 지사가 과거의 조선인 학살에 진지하게 눈을 돌려 추모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동안의 도쿄 도지사가 해온 추모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다시 추도사를 보내도록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국가 책임을 묻는 모임 학습회 참석자 일동

자세한 것은 웹사이트 "'조선인 학살은 없었다'는 왜 엉터리인가"를 참조.
(<http://01sep1923.tokyo/>)